신항락 칼럼

'밥 한 끼', 아전인수 아닌 역지사지로

이사·주필

누군가 신발을 사러 가는 날, 길에 보이는 건 모두 신발뿐이다. 길 가는 사람들의 신발만 눈에 들어온다. 미장원에 다녀오면 사람들의 머리에만 시선이 집중된다. 그 외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세상은 내가 보는 대로 있기 때문이다. 빌려 온 가짜 진주목걸이를 잃어버리고는 그걸 진짜로 갚으려고 평생을 고생한 모파상의 어느 여인 이야기도 이에서 비롯된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가치관의 혼돈에 빠져 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어느 쪽이 바른 길인지의 판단 문제는 고사하고 상호 모순되는, 때로는 정반대의 가치관이 공존하는 어지러운 상황이다.

7개월여 이 나라를 뒤흔든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현재 미로에 갇혀 있는 무상복지만 해도 그렇다. 어린이집 보육료(누리과정)를 둘러싼 중앙과 지방정부, 중앙과 교육감 간의 대립이 여야 정치공방으로 번지면서 '식판 논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정부 여당은 무상보육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무상급식은 아니며, 무상보육은 법적으로 교육청 책임이라는 것이다.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이니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무상급식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공약이니 너희들 알아서 하란 얘기다.

하지만 무상급식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거치며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다. 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3년째 무상급식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도 "무상보육 대선 공약 나가시니 무상급식은 비켜라"는 식으로 나오는 건 억지에 가깝다.

'너는 안 된다'는 정부 여당

법적으로 따지는 것도 무의미하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약하고 무상보육은 근거가 있다는 정도의 차이가 과연 설득력이 있는가.

더욱 가관인 것은 정치권이 현재의 상황을 '보수 대(對) 진보'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여당과 야당·진보 교육감 간의 이념적 대결로 재단해 갈등을 키우고 있는 양상이다. 당장 몇 개월 후면 전국의 시·도 교육청이 예산을 세우지 못해 '보육대란'이 일어날 판에 '네 탓'도 모자라 이념 논쟁까지 벌이고 있으니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아전인수 식 떠넘기기는 곳간이 비어 있는데도 인심을 내겠다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의 산물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광주와 전남교육청, 각 자치단체가 돈 문제에 자유로울 수 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불용액은 1100억 원, 금년에는 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 최대 규모다. 전남교육청 역시 지난해만 1000억 원에 이른다. 쓰지도 못할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다음 해로 이월시키고 있으니 정부 여당으로부터 역공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차라리 그 돈을 무상보육에 사용하면 부담을 덜 수 있지 않느냐는 추궁에 이유야 있겠지만 그 답은 궁색하게 들릴 뿐이다.

자치단체장의 선심·전시성 사업과 행사, 그릇된 판단에 따른 예산 낭비, 줄줄 새는 보조금과 간 큰 공무원들의 각종 비리도 부지기수다. 6000억 원의 빚잔치를 벌였던 F1대회와 지금까지 혈세만 1400억 원을 삼킨 광주2순환도로를 비롯해 빚을 내 이자를 갚는 여수 경도개발사업 등 애물단지는 수두룩하다.

지자체도 자유롭지 못해

80억 원을 들인 광주 광엑스포 건물은 5년 째 텅텅 비어 있는데도 유지비로 매년 3억 원씩 축내고, 사파리 아일랜드(야생동물의 섬) 조성은 최근 전남도가 사업을 포기해 토지 매입비와 용역비 등 74억 원을 날렸다. 전남 도내 시·군이 운영 중인 나주배박물관 등 공립박물관 30곳도 적자투성이다. 하루 평균 관람객은 10명 선, 2010년부터 3년간 쌓인 적자만 488억 원에 이른다.

또 일선에서 벌어지는 축제와 행사는 어떠한가. 지난 6년간 전남지역 자치단체가 쓴 비용은 무려 6345억 원, 광주 각 구청의 787억 원 등 1년에 1200억 원가량 쏟아부었다. 대표적인 시·군 축제 22개 중 21개는 적자 잔치를 벌였다.

이 모두는 출혈이 뻔한데도 단체장의 선심성 치적과 소영웅주의, 내 돈이 아니라는 무책임이 원인이다. 마른 수건도 짜야 할 판에 재정을 거덜 내고 있으니 법으로 따지자면 특가법상 배임에 해당된다.

물론 전국의 각 자치단체가 복지 디폴트(지급 불능)를 선언하겠다고 정부에 으름장을 놓는 근본적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중앙과 지방 간의 세원 배분 구조가 8대2로 돼 있는 데다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은 갈수록 줄고, 천문학적인 복지비를 지방에 떠넘겨 파산 직전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너는 내놓고, 나는 헛돈 쯤이야' 라는 식은 곤란하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지만 아랫물마저 맑지 않다면 미래는 더 암담해진다. 정부는 더 이상 '아전인수' 식은 안 되며 지자체도 '역지사지'로 풀어야 한다. 증세를 포함한 '곳간 단속' 외엔 달리 도리가 없다. 아니라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은펜칼럼

1년 내내 아삭한 김치 맛보려면

옥 영 석
은펜상 2005년 수상자

날이 추워지니 "김장을 해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바빠진다. 여느 해처럼 정성들여 김장을 했건만, 웬일인지 지난해 김치는 봄이 되기도 전에 물러져버렸다. 간장에 비벼 먹어도 한두 끼야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몇 달 동안 무른 김치를 먹어야하는 건 고역이었다. 몇 주 전부터 날을 잡아 배추와 젓갈은 마트에서, 고춧가루와 양념은 고향에서 조달하고, 하루 전날 양념을 버무리고 절임배추는 체에 밭아 물기를 빼어두고… 관혼상제 못지않은 계획을 세워 담근 김치가 애물단지가 되고나니, 버리기에는 아깝고, 두고 먹기에는 짜증나는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퇴근길 버스에서 김치가 무르는 이유는 중국산 고춧가루 때문이라는 TV보도를 보게 되었다. 도중에 내려 끝까지 볼 수는 없었지만 대충의 내용인즉, 색택만 좋은 중국산 고추가 제 기능을 못해 한두 달도 못가 김치를 무르게 한다는 것이다. 고춧가루는 아내가 조달한터라, 조심스레 얘기할 노릇이었건만 여름내 무른 김치를 먹어야했던 억울함이 이성을 제쳐 소리치게 했다. "그게 결국 당신이 가져온 고춧가루 때문이라잖아".

김치는 이미 물러졌고 원인이야 고춧가루였든 배추였든 뭐 그리 중요한 일이랴만, 말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몇 주 동안은 눈칫밥을 먹어야 했다.

억울해진 마음에 다시 찾아보니 김치가 무르는 이유는 한 두 가지가 아니란다. 희아리, 즉 탄저병 등으로 무른 고추를 말려 희끗희끗하게 얼룩이 진 고추를 쓰거나 중국산과 섞인 고춧가루를 쓴 경우다. 압축초라 불리는 색이 진한 중국산 고춧가루를 30%만 섞어도 일반인은 쉽게 알아보지 못한다고 한다.

결구가 덜되거나 화학비료로 속성으로 키운 배추도 원인일 수 있으니 비닐하우스가 아닌 노지에서 3달 이상 키운 배추가 좋겠다.

배나 사과 등 과일을 넣으면 초기 김치 맛은 좋아질 수 있지만 산화를 촉진시켜 쉽게 물러질 수 있으니 많이 넣지 않아야 한다.

온도가 높은 욕실에서 따뜻한 소금물에 적셔 배추를 절이지 말고, 베란다나 실외에서 절이되, 화학조미료와 과다한 양념, 간수를 덜 뺀 소금이나 중국산 소금은 삼가는게 좋다. 잘 담근 김치라 해도 숙성을 위해 실온에 너무 오래두거나, 탑 탤런트가 광고하는 김치냉장고라도 온도설정을 잘못하면 물러지게 마련이다.

결국 맛있는 김치를 일년내내 먹을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직접 재배하여 담거나, 너무너무 잘 아는 친지가 보내준 것이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하는 것뿐이니, 다소 귀찮고 비용이 들더라고 원산지며 제조일, 함량 비율 등 표기사항을 확인, 또 확인해 볼 일이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 고

이등병의 편지

박 동 주
호남대학교 초빙교수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의 가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요즘 젊은이들의 가슴의 먹먹함이 더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지난 10월 14일 국정감사 중 정부가 밝힌 내용대로라면 이제 이등병의 편지는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편지가 되었다. 최근 발생한 군 복무중인 병사들이 자살과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병의 계급체계를 현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겠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군이라는 조직은 계급이 조직운영의 근간임을 거부할 수 없고, 이런 이유로 연령도 불문하고 입대일자를 기준으로 삼아 선임과 후임을 나누는 것이다. 소위 '군대는 짬밥이다.' 라는 말이 이를 잘 표현해준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계급체계를 간소화 하여 계급의 의미를 희석하겠다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 놓았다. 계급사회에서 계급간 갈등이 있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며, 이러한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검토해야 함이 당연한 것임에도 계급을 희석시키려는 정말 단순한 대안을 내놓은 것은, 최근 세월호 사태의 해결방안으로 정부 조직 개편을 하는 것과 너무나 닮아 있는 발상이 아닌가 싶다.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가 단순하게 계급적 갈등의 결과물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시각이다. 정부는 사병의 계급체계를 2단계로 개편하고 상병 중 우수 병사를 병장으로 선발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군 생활을 마치는 시점을 앞두고 병장으로 선발되지 못한 군인들로 하여금 낙오병사라는 낙인을 찍게 되어, 후임병이 선임병을 무시하는 등 계급체계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어 보인다.

군 입대 전까지 끊임없이 경쟁사회에 매몰되어 있다가 군대라는 계급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다시금 경쟁체제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낳을 것이다.

게다가, 2년여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사회로 복귀하는 20대 청년들에게 군대에서 낙오병사, 관심병사와 같은 낙인을 찍는다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거나 상실하게 될까 심히 우려된다.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하지만, 계급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대책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대안을 검토하고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군에서도 감수성이 예민한 병사나 체력이 약한 병사를 배려하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군 사건사고의 원인을 개인의 복무 부적응으로 취급하며 명령과 규율로 통제되는 군 내부에서 구타와 욕설 등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는 지휘관의 인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동일 계급 내에서도 입대일자로 선후임이 구별되는 현실을 개선하여, 훈련소의 훈련병 동료가 자대 배치 후에도 같은 계급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현 제도를 일부 수정하여 같은 계급끼리 끈끈한 동료애와 군인정신을 함양하는 동기 부여 정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군 복무기간이 허비하는 시간이 아닌,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만들고 끈끈한 동료를 만들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뀔 때,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들이라는 자부심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社 說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재정 고려해야

1조9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놓고 연기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굵직한 현안 사업 예산을 비롯한 재정 보전비용, 복지비 부담 등 광주시의 열악한 살림 형편 때문이다.

광주시 중기 재정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3조8500억 원 중 사회복지비 예산만 1조394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6%나 된다고 한다. 또한 내년도에 열리는 하계U대회 운영비 등으로 1000억 원이 소요 되는데다 민선 6기 공약 사업, 지하철·시내버스·제2순환도로 사업비 보전 등의 재정 수요를 감안하면 기존 부채 2238억 원에다 추가로 623억 원의 빚을 내야 할 처지다.

이런 상황에 도시철도 2호선이 2016년 착공에 들어갈 경우 완공 시점인 오는 2024년까지 도시철도 건설비로 매년 800억 원을 투입하고, 개통 후에는 1·2호선 운영비로만 한 해 1000억 원가량의 적자를 시 예산으로 보존해야 한다. 1·2호선의 예상 수송 분담률이 11.21%에 불과하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하지만 노선 주변의 시민들과 지역구 정치인, 건설단체 등은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시철도를 건설하지 않을 경우 이미 확정된 1조1432억 원의 국비 지원이 물거품 되고 향후 다시 추진하더라도 10년 이상의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광주시가 2호선 대신 버스 증차를 통해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버스 적자 보전과 도로 확장 등을 고려하면 비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설명이다. 우리는 양측의 주장에 공감하지만 재정과 향후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광주시는 토론회와 공청회 등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논란과 갈등이 계속되면 시정은 물론 시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혈세 받아 시내버스 업체 대표 배만 불리나

광주 시내버스 일부 업체의 도덕적 해이와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어 공분을 일으키게 한다. 준공영제에 따라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도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정비 비용 지출엔 인색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적자 상태에서도 일부 버스업체 대표이사들은 연봉을 꼬박꼬박 올려 받아 과연 누구를 위한 준공영제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지난해 광주 지역 시내버스 업체 8곳의 대표이사 평균 연봉은 6512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2년 5975만 원보다 537만 원 오른 액수다. 심지어 한 해 봉급이 1억 원이 넘는 업체 대표도 있으며 76.36%나 오른 연봉(5500만 원→9700만 원)을 받는 사람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 연봉은 지난 2006년 준공영제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적게는 3.29%, 많게는 15.76%까지 꾸준히 늘었다. 시민들의 생활이 더 빠듯해지는 사이 시내버스 회사 사장들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배를 불리고 있는 것이다.

혈세를 지원받는 상황이라면 시민 안전이라도 챙겨야 할 텐데 이마저도 뒷전이었다. 일부 업체는 시내버스의 충격 완화 장치인 휠대 교체 비용을 아끼려고 아예 제거한 채 차량을 운행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매년 광주시의 재정 보조를 받으면서도 돈이 아깝다며 시민 목숨을 담보로 버스를 굴리고 있는 셈이다.

광주시는 준공영제가 시행된 2007년 196억 원, 2008년 295억 원을 비롯해 지난해에는 89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바 있다. 시는 지원금 상당액이 버스 회사 사장 주머니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닌지 정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시민 발 노릇을 한다는 명분으로 혈세마저 챙기고 있는 버스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시는 즉각 감사를 벌여 위법이 있다면 지원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로봇

체코의 극작가 카렐 차페크가 1920년 발표한 자신의 출세작 '로숨의 유니버설 로봇(Rossom's Universal Robots·RUR)'으로 인해 '로봇의 아버지'로 불리게 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희곡 'RUR'에서 생물학자 로숨이 만든 '인조인간'에 로봇(Robot)이라는 이름을 붙여진 데는 이유가 있다.

중세시대 체코는 강대국 오스트리아의 압제에 눌려 살았다. 오스트리아는 체코를 정복한 뒤 땅을 멋대로 나눠 가졌으며, 체코인들에게 농사를 비롯한 강제노동까지 시켰다. 얼마나 수탈이 심했던지 일 년 동안 고생해서 추수한 곡물을 오스트리아인 주인에게 바치고 난 뒤 굶어 죽는 체코인도 적지 않았다.

체코인들은 여행이나 이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결혼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도 반드시 오스트리아인 주인에게 엄청난 세금을 내고 허락을 받아야만 했다. 체코인들은 나라의 아버지, 즉 왕이 없어서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서럽고 힘들게 산다고 생각해 스스로를 '고아'라고 불렀다.

당시 체코인들은 부모가 없어 여기저기 팔려 다니는 고아를 '라보타(Rabota)'라고 불렀다. 중세 체코말로 '노비'를 뜻하는 'Robot'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단어다. 이 체코 말이 차페크의 'RUR'을 통해 영어권으로 들어와 '기계 인간'이라는 고유명사가 된 것이다.

차페크의 'RUR'은 처음엔 사람들의 삶을 돌봐주던 로봇이 점점 똑똑해져 마침내는 반란을 일으켜 오히려 인간을 노비로 만드는 세상을 그리고 있다. 극에서 로봇 라디우스는 "만국의 로봇들이여! 공장을 손에 넣은 지금, 우리는 전 세계의 지배자가 되었다. 인류의 시대는 끝났다. 로봇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한다.

94년이 지난 지금, 차페크의 예언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는 최근 '로봇과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20년 안에 기존의 일자리 3개 중 1개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긴 암울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미래를 예견한 극작가들의 통찰력엔 박수를 보내지만, '로봇이 득세하는' 어두운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홍행기 경제부장redplane@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대표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FAX 222-4267〉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96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